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 제 () 선택

[빠른 정답표]

1.	④	6.	③	11.	①	16.	⑤
2.	③	7.	②	12.	④	17.	③
3.	⑤	8.	②	13.	②	18.	⑤
4.	④	9.	④	14.	③	19.	①
5.	③	10.	③	15.	②	20.	④

1. 메타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의 입장 이해하기

[Comment]

아주 무난하다.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가)는 메타 윤리학, (나)는 실천 윤리학이다.

[선지 분석]

- ① 규범 윤리학의 주된 목표이다. 그런데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이 아니다.
- ② 기술 윤리학의 주된 목표이다.
- ③ 메타 윤리학의 주된 목표이다.
- ④ 실천 윤리학의 주된 목표이다. 덧붙일 설명이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개념이다.
- ⑤ 이론 윤리학의 주된 목표이다.

2. 불교와 도가의 입장 이해하기

[Comment]

기본적인 개념들로만 이루어진 문항.

[정답] ③

[제시문 설명]

값은 불교 사상이, 음은 도가 사상가이다.

[선지 분석]

- ① 불교에서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고 본다. 덧붙일 설명이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개념이다.
- ② 불교에서는 정신에든, 물질에든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인간을 구성하는 오온(五蘊) 중에는 물질적 요소인 색온(色蘊)뿐 아니라 정신적 요소인 수온(受蘊), 상온(想蘊), 행온(行蘊), 식온(識蘊)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고정된 실체인 것이 없다.
- ③ 도가에서는 자기 중심적 고정 관념, 선입견 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덧붙일 설명이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개념이다.
- ④ 도가에서는 유교의 인(仁)을 비판한다.
- ⑤ 도가 사상가가 부정할 진술이다. 도가에서는 내세를 논하지 않는다.

3. 칸트의 입장 이해하기

[Comment]

기본적인 개념들로만 이루어진 문항.

[정답] ⑤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사상가는 칸트이다.

[선지 분석]

- ① 칸트는 보상을 기대하고 행동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 ② 칸트는 동정심이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③ 칸트는 결과적 고통의 크기를 비교하여 행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 ④ 칸트는 거짓 약속이 결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 ⑤ 칸트는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칙인 격률이 도덕 법칙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편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만일 어떤 준칙이 보편화 가능하다면, 그것은 도덕 법칙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 거짓 약속을 해도 된다."라는 준칙이 보편화될 경우, 약속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준칙을 도덕 법칙으로 삼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길이라고 본다. 생각해 보자. 거짓 약속을 해도 좋다는 준칙을 모든 사람이 세운다고 할 때, 약속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겠는가? 누구도 약속은 신뢰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 말이다.

4. 에피쿠로스의 죽음관 이해하기

[Comment]

에피쿠로스가 볼 때 죽음은 감각을 소멸시키는 것.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가상 대화의 인터뷰이는 에피쿠로스이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결론으로 하는 에피쿠로스의 논증을 잠시 분석해 보자.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좋고 나쁜 것은 감각에 달려 있고, 좋은 것은 쾌락, 나쁜 것은 고통이다. 고통이 나쁜 것이므로 고통은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것으로 적절하다. '죽음이 두려워할 만한 것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죽음이 고통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된다.

그런데 쾌락이나 고통은 감각의 일종이므로, 감각이 없다면 쾌락이나 고통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죽음은 인간의 감각 능력을 소멸시킨다. 따라서 죽음은 쾌락도, 고통도 아니다. 고통이 아니므로,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선지 분석]

- ①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 ② 에피쿠로스는 죽은 후에는 고통을 겪지 않게 된다고 본다. 이것은 죽음이 인간의 감각 능력을 소멸시키기 때문으로, 죽은 후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뭔가를 해야만 죽은 후에 고통을 겪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다.
- ③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인간의 감각 능력을 소멸시키므로 죽은 후에는 고통을 겪을 수 없다고 본다.
- ④ 에피쿠로스의 입장에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이다. 위의 [제시문 설명]을 다시 읽어 보자.
- ⑤ 에피쿠로스는 죽은 후에 쾌락을 얻을 수 없다고 본다. 죽음은 인간의 감각 능력을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5. 중도주의와 보수주의 간 토론의 쟁점 파악하기

[Comment]

얼마나 꼼꼼히 읽는가의 싸움. 제시문 독해가 중요하다.

[정답] ③

[제시문 설명]

갑은 중도주의, 을은 보수주의의 입장에 있다.

[선지 분석]

- ① 갑, 을 모두 동의하지 않을 내용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② 갑, 을 모두 동의할 내용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③ 갑은 동의하지 않고 을은 동의할 내용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다.
- ④ 갑, 을 모두 동의할 내용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⑤ 갑, 을 모두 동의할 내용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갑 역시 “성관계와 그와 같은 책임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성관계가 출산과 양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보수주의의 진술에 동의하고 있다. 성적 관계에 대한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의 입장을 묻는 문제를 풀 때는 개념적 지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제시문 독해에도 힘써야 한다.

6.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상반된 입장 이해하기

[Comment]

제시문과 선지 사이에 추론 간격이 좁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

[정답] ③

[제시문 설명]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선지 분석]

- ㄱ. 갑은 배아가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발달 단계에 따라 배아의 도덕적 지위가 달라진다는 언급은 없다.
- ㄴ. 을은 배아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않으며, 인류의 의료적 혜택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본다.
- ㄷ. ㄴ 선지의 해설을 참고.
- ㄹ. 을만의 입장이다. 갑은 배아 복제가 설령 유용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7. 정약용의 공직자 윤리 이해하기

[Comment]

제시문 독해에만 충실해도 괜찮다.

[정답] ②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선지 분석]

- ① 제시문에서 정약용은 “관청의 재물이나 자산이 여유롭다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검소함을 지녀야 한다.”라고 말한다.
- ② 제시문에서 정약용은 “부모님이 노쇠하고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은 진실로 딱한 일이다. 그렇다고 자신의 딱한 처지를 벗어나고자 목민관이 되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 ③ ① 선지의 해설을 참고.
- ④ 정약용은 목민관이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① 갑: 공직자는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의 경계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 (정약용 X)
-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6번 문항 -

- ⑤ 제시문에서 정약용은 “또한 고을의 선비들에게 학문을

권장하기 위해 한 수레의 책을 가져가는 것이 청렴한 관리의 자세이다.”라고 말한다.

8. 유교의 예술관 이해하기

[Comment]

아주 무난하다.

[정답] ②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유교 사상가의 입장이다.

[선지 분석]

- ㄱ. 유교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유교는 예술에 대해 도덕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제시문에서도 “음악은 궁극적으로 인격을 완성시킨다.”는 진술을 찾을 수 있다.
- ㄴ. 유교에서는 음악이 예의를 함양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본다.
- ㄷ. 유교의 기본 입장이다. 유교는 예술에 대해 도덕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 ㄹ. 유교에서는 음악의 가치를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9. 롤스와 노직의 분배 정의 이론 이해하기

[Comment]

처음부터 끝까지 기출문제.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선지 분석]

- ㄱ. 자연적 운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이다. 박효신 대장님께서는 노래를 아주 잘 부르시지만, 유삼환은 그렇지 않은데, 이러한 재능이 각자에게 응분의 몫인 것은 아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 박효신 대장님은 좋은 성대를, 유삼환은 평범한 성대를 가진 것이다. 롤스에 따르면 이러한 임의성을 처리하는 공정한 방식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요소인 자연적 재능을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하는 차등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만일 박효신 대장님께서 자신이 가진 신(神)급의 노래 실력을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요소인 자연적 운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갑: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여,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을 이용하기로 약속한다. 이러한 차등 원칙은 운명의 우연성을 공정하게 다루는 정의로운 방식이다.
- 롤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번 문항 -

- ㄴ.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소득의 격차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롤스가 제시하는 차등의 원칙의 내용이다.

을: 기본적 자유들은 서로 상충할 수 있기에 조정되어야 하지만,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고 직위와 직책의 기회가 공정하다면 재산 및 소득의 분배는 균등할 필요가 없다.
- 롤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번 문항 -

② 갑: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사회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틀스 O)
- 톨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번 문항 -

ㄷ. 노직은 역사적 원리에 따른 부의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부의 불평등이 발생하기까지의 취득과 이전의 역사적 과정이 정의로웠다면, 그러한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직이 주창하는 분배적 정의가 '역사적 원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갑: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소유 권리를 갖는 것들을 주지 않는 분배 행위는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데 소유 권리는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는 역사적 원리에 따라야 한다.
- 노직,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번 문항 -

ㄷ. 톨스와 노직은 모두 각 개인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사회적 윤의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톨스의 경우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조건으로, 노직의 경우 역사적 원리에 따랐느냐를 조건으로 제시할 것이다.

10. 벤담, 베카리아, 칸트의 형벌 이론 비교하기

[Comment]

역시나 처음부터 끝까지 기출문제.

[정답] ③

[제시문 설명]

갑은 벤담, 을은 베카리아, 병은 칸트이다.

[선지 분석]

① 벤담이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벤담은 형벌의 주목적이 범죄자와 그 밖의 사람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본다. 형벌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범죄자가 형벌로 겪는 고통을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그들 역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갑: 형벌의 주목적은 범죄자와 그 밖의 사람들이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다. 공리의 원리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가해져서는 안 된다.
- 벤담,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14번 문항 -

② 벤담에게 제기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벤담에 따르면 형벌의 종류와 크기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정해져야 한다. 벤담은 기본적으로 결과를 고려하는 공리주의 사상가이므로, 형벌의 종류와 크기는 그 형벌이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가 형벌의 해악이 형벌이 야기할 해악보다 작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③ 칸트는 응보주의의 입장에서 형벌은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지는 것일 뿐이므로 다른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반면 벤담과 베카리아는 예방주의의 입장에서 형벌이 범죄 예방 등의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본다.

④ 베카리아가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베카리아는 사형에 반대하며, 사형은 시민에게 지속적인 공포 인상을 줄 수 없다고 본다.

⑤ 벤담이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벤담은 형벌로부터 초래되는 해악이 형벌로 인해 예방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형벌로부터 초래되는 해악을 형벌 부과 시

고려하는 것이다.

ㄷ. 을: 형벌이 초래할 해악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벤담 O)
-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항 -

11. 흄스와 로크의 사회 계약 이론 이해하기

[Comment]

기본적인 개념들만을 묻고 있다.

[정답] ①

[제시문 설명]

갑은 흄스, 을은 로크이다.

[선지 분석]

ㄱ. 흄스와 로크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흄스와 로크 모두 사회 계약으로 공권력이 형성된 이후에는 국가가 개인의 자연권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고 본다.

ㄴ. 흄스는 부정, 로크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흄스는 정부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더라도 시민이 정부를 해체할 수는 없다고 본다. 반면 로크는 정부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시민은 이에 저항하여 정부를 해체할 수 있다고 본다. 로크가 '행정부'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가 인민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은 윤리와 사상 기출문제 제시문에서 언급된 적이 있다.

갑: 국가의 단일한 최고 권력인 입법부는 사회에서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권이 이러한 입법부의 업무를 무력에 의해서 방해할 때 인민은 그것을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리뿐만 아니라 예방할 권리도 가진다.
- 로크, 2018학년도 윤리와 사상 9월 모의평가 7번 문항 -

ㄷ. 흄스와 로크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흄스와 로크 모두 개인이 국가에 복종해야 할 의무는 사회 계약에서 토대를 둔다고 본다. 즉 이들은 공통적으로 국가가 가지는 권위의 근거를 개인의 '동의'에서 찾는 것이다. 이는 사회 계약론 사상가인 흄스와 로크의 주장이 개인이 국가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개인의 본성에 토대를 둔다고 보는 인간 본성론 사상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대립하는 지점이다.

ㄷ. 흄스와 로크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흄스와 로크는 모두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이성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를 수립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본다.

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는 부정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쟁 상태에서는 소유권도 지배권도 없으며, 네 것과 내 것의 구분도 없다. 평화를 추구하는 본능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 기인한다. 인간의 이성은 평화의 조항들을 제안하는데 우리는 이를 자연법이라 한다.
- 흄스,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98p 5번 문항 -

12. 싱어와 롤스의 시민 불복종 이론 이해하기

[Comment]

ㄴ 선지의 개념은 이미 며칠 전 예고된 바가 있다.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선지 분석]

ㄱ. 시민 불복종이 위법 행위라는 것은 시민 불복종의 정의상

누구나 동의할 만한 내용이다. 그런데 싱어는 시민 불복종이 법치를 존중하는 행위임을 강조한다. 역시 기술문제에서 이미 언급된 바가 있다.

ㄷ. 을: 시민 불복종을 하는 시민은 보편적 법치 원리를 존중한다. (싱어 O)
-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7번 문항 -

유명한 제시문도 하나 있어 보겠다. 한 번쯤은 읽어 보았을 만한 내용이다.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으므로써, 비폭력적으로 행위함으로써,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명백히 한다.
- 싱어, 『실천 윤리학』 468p -

ㄴ. 롤스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는 기본적 자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 역시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2022.06.06.(월) 배포된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대비 Killer 7+2 모의고사]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해당 모의고사의 2번 문항 ② 선지의 내용과 해설을 보자.

② 종교 단체를 억압하는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롤스 O)
해설: 롤스는 종교 단체를 억압하는 정책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롤스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는 기본적 자유에 해당하고,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종교적 교리일 수 없다는 것과,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

롤스의 시민 불복종 이론에서 '종교'만 나오면 무조건 X라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의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 출제된 문항이었고, 비슷한 아이디어가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되었다. 그런데 이 선지에서 이런 생각을 한 수험생도 있을 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기본적 자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고 해서 다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 침해 정도가 심각해야 하고, 합법적 수단으로 그 부정의를 교정할 수 없는 상황일 때만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므로, '된다.'를 '될 수 있다.'로 써야 옳은 것 아닌가?" 타당한 지적이다. 논리적으로는 이러한 지적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평가원이 비슷한 상황에서 문장을 어떻게 썼었는지 확인해 보자.

② 공직을 맡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롤스 O)
-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7번 문항 -

정확히 같은 상황인데, 평가원은 '된다.'라는 표현으로 문장을 마무리한 적이 있다. '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된다.'라는 표현이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 두는 편이 좋을 듯하다.
ㄷ. 낯선 개념이었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이 항의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 법을 어길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A라는 법을 변혁하기 위해 꼭 A라는 법을 어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시민 불복종이 A라는 법을 변혁하기 위해 A라는 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은 A라는 법을 변혁하기 위해 B라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롤스는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시민 불복종뿐 아니라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의에 대한 한 가지 예비적인 설명을 하자면 시민 불복종 행위가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법을 위반하라는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시민 불복종이라고 부르는 것뿐 아니라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이라 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때로는 부정의하다고 간주되는 법이나 정책도 어기지 않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정의의 마땅히 그러한 고려를 해야 한다. 그 대신에 우리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교통 법규나 비행에 관한 법을 어길 수도 있다. 그래서 만일 정부가 반역죄에 대한 애매하고도 가혹한 법령을 제정할 경우 그에 대한 항의의 방식으로 반역죄를 범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이에 대한 형벌은 우리가 합당하게 받게 되어 있는 것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 롤스, 『정의론』 476p -

ㄹ. 싱어와 롤스 모두 동의하지 않을 진술이다. 싱어는 현대의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 원칙이 현실적으로 다수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그는 만일 진정으로 다수의 의사를 반영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롤스는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가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에 따른 것이므로 다수결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 역시 부정의할 수 있다고 보고,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적인 법률의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은 다른 전술을 시도할 수 있다. 만약 합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개혁하지 못했다면, 이는 제안된 개혁이 다수 유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수의 바람과 반대로 불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변화를 수행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중심적인 원칙, 즉 다수결의 규칙 majority rule 을 위배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항의자들은 이러한 논변에 사실적 근거와 철학적 근거, 양쪽에서 도전할 수 있다. 민주주의자의 논증에 들어 있는 사실적인 주장은 합법적인 수단으로 실행될 수 없는 개혁은 다수 유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전체 유권자가 각각의 문제들에 대하여 투표하는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언제나 타당한 것은 확실히 아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다수의 대표자들이 다수의 선거구민과 같은 견해를 가질 것임을 보장할 방법은 없다. 텔레비전에서 케나렐리의 비디오테이프에서 발췌한 부분을 본 미국인들 다수는 그 실험을 지지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상당히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다. 대표자들을 선택할 때, 혹은 정당을 선택할 때, 선거인들은 제시되어 있는 저 '꾸러미'의 정책이 아니라 이 꾸러미의 정책을 선택한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정책에 찬성투표를 하기 위해서 투표자들은 그들이 열망하지 않는 다른 정책에도 찬성해야만 하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된다. 투표자가 좋아하는 정책이 어떠한 주요 정당에 의해서도 제안되지 않는 일도 또한 생기게 된다. 미국에서 임실중절의 경우, 중대한 결정은 다수 투표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단순히 다수의 선거인들에 의해서 전복될 수 없다. 대법원 자체에 의해서만, 혹은 소수의 선거인도 저지할 수 있는 헌법의 수정이라는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만 뒤집을 수 있다.

만약 항의자들이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릇된 일을 다수가 인정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 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복종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적 논변의 기초가 되는 철학적인 주장, 즉 우리는 다수의 결의를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다루게 된다.

다수결의 규칙에 대한 옹호론이 과대평가되지는 말아야 한다. 지각 있는 민주주의자라면 어떤 사람도, 다수가 언제나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49%의 사람들이 틀릴 수 있다면, 51%의 사람들도 틀릴 수 있다. ... (후략)

- 싱어, 『실천 윤리학』 462~463p -

헌법이란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건이 허용하는 한에서 형성되는, 정의롭긴 하지만 불완전한 절차로 생각된다. 그것이 불완전한 이유는 헌법에 따라서 제정된 법이 정의로운 것이기를 보장해줄 현실적인 정치 과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달성될 수가 없다. 더욱이 입헌 과정은 어떤 형태의 투표에 상당한 정도로 의존해야 한다. 단순화를 위해서 나는 다수결 원칙의 어떤 형태도 적절하게 제한되는 것이 실제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롤스, 『정의론』 462~463p -

13. 베블런의 소비 이론 이해하기

[Comment]

아직까지는 독해형 문항으로만 출제되는 베블런의 이론.

[정답] ②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사상가는 베블런이다.

[선지 분석]

- ① 제시문에서 베블런은 “어떤 계급도, 즉 아무리 빈곤한 계급이라도 관례적인 과시적 소비를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말한다.
- ② 제시문에서 베블런은 빈곤한 계급도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과시적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 ③ 제시문에서 베블런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과시적 소비를 할 수밖에 없으며, 과시적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부(富)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 ④ 제시문에서 베블런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과시적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 ⑤ 제시문에서 베블런은 “산업 사회에서 유휴계급은 사회적 명성의 측면에서 사회 구조의 정점에 위치하고 그들의 생활 양식은 사회의 평가 기준이 된다.”라고 말한다.

14.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글의 입장 이해하기

[Comment]

약간은 독특한 형태로 나왔지만, 그냥 꼼꼼히 읽고 풀면 된다. 별다른 해설을 하지는 않겠다.

[정답] ③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인공지능이 비윤리적인 일상 언어를 학습하여 생기는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여과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의 윤리적 판단 능력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지 분석]

- ① ㉠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다.
- ④ ㉠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15. 롤스와 싱어의 해의 원조 이론 비교하기

[Comment]

ㄷ 선지는 이미 제시된 개념을 하고 있다.

[정답] ②

[제시문 설명]

같은 롤스, 음은 싱어이다.

[선지 분석]

ㄱ. 롤스는 원조의 목표가 원조 대상국의 정치 체제를 개선하여 원조 대상국을 고통받는 사회에서 질서 정연한 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반면 싱어는 원조의 목적이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이라고 본다.

롤스	• 원조의 목적을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두지 않음
----	--

-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177p -

⑤ 원조의 최종 목적은 고통 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싱어 X)

-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3번 문항 -

ㄴ. 롤스는 국가 간 부의 재분배 없이도 원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롤스에 따르면 원조의 목표는 원조 대상국을 질서 정연한 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인데, 한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원의 부족보다는 정치 체제의 결함에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롤스는 빈곤의 문제 역시 자원의 부족보다는 정치 체제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음: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체제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해의 원조를 해야 한다. 빈곤의 문제는 주로 정치 체제의 결함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각 사회의 고유한 문화나 역사에 따라 필요한 부의 수준은 다르다.

- 롤스,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 문항 -

ㄷ. 롤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롤스는 원조 대상국에게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원조 대상국을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든다는 원조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원조에 있어서 원조 대상국에게 인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본다. 롤스에 따르면 질서 정연한 사회란 구성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감: 인권에 대한 강조는 무능한 정치체제나 국민의 복지에 무감각한 통치자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작용할 수 있으며 기근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로 바뀌도록 돕는 데 있다.

- 롤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7번 문항 -

ㄷ. 싱어는 결과주의적 관점에서 원조 의무를 정당화하는 사상가로서, 원조를 통한 이익이 원조로 인한 희생보다 클

경우에만 원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싱어에 따르면 설령 빈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를 원조함으로써 원조 주체가 얻는 희생이 더 크다면 원조가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

나. 을: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싱어 O)

-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8번 문항 -

16.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글의 입장 이해하기

[Comment]

꼼꼼히 읽고 풀면 된다. 별다른 해설을 하지는 않겠다.

[정답] ⑤

[제시문 설명]

칼럼은 정보 기술의 발달이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선지 분석]

- ①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 ②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 ③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 ④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 ⑤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17. 포퍼의 관용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Comment]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의 내용이 나왔지만, 중요하지 않다. 그냥 꼼꼼히 읽고 풀면 된다.

[정답] ③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사상가는 포퍼이다.

[선지 분석]

- ㄱ. 포퍼는 제시문에서 “우리가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무제한의 관용을 베풀다면, 관용적인 사람들은 파멸할 것이고 관용도 소멸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모든’ 문화를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ㄴ. 포퍼는 관용의 자세를 강조한다. 이는 자기 문화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 ㄷ. ㄱ 선지의 해설을 참고.
- ㄹ. 포퍼는 어떤 문화가 바람직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 포퍼에 따르면 일단 적어도 어떤 문화가 타 문화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지니는지는 그 문화가 바람직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8.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이해하기

[Comment]

기출문제 +a이다. ④ 선지도 분명히 이미 언급된 적이 있는 내용인데... 당장은 못 찾겠다.

[정답] ⑤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사상가는 하버마스이다.

[선지 분석]

- ① 하버마스는 오류 가능성을 내포한 주장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나.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도 담론에 부칠 수 있다. (하버마스 O)
-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3번 문항 -

- ② 하버마스는 개인적 선호나 욕구를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②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욕구를 말해서는 안 된다. (하버마스 X)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번 문항 -

- ③ 하버마스는 참여자 다수의 동의로가 아니라 만장일치로 규범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ㄹ. 규범의 타당성은 참여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확보된다. (하버마스 X)

-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3번 문항 -

- ④ 하버마스는 이미 합의에 이른 적이 있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⑤ 하버마스는 발언 기회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본다. 덧붙일 설명이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개념이다.

19. 싱어, 칸트, 레오폴드의 환경 윤리 이론 비교하기

[Comment]

싱거운 정도의 기출문제 재탕.

[정답] ①

[제시문 설명]

같은 싱어, 을은 칸트, 병은 레오폴드이다.

[선지 분석]

- ㄱ. 싱어는 공리주의 사상가인 반면, 칸트와 레오폴드는 아니다. 비슷한 선지가 이미 출제된 적이 있다.

ㄱ. A: 공리의 원리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근거가 아니다. (싱어, 칸트, 레오폴드 中 칸트만의 입장은 아님)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5번 문항 -

위 기출문제를 선지를 보자. 싱어, 칸트, 레오폴드 중 싱어와 레오폴드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한다. 만일 레오폴드가 공리의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위 선지의 진술은 칸트만의 입장으로 적절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었다!

나. 칸트뿐 아니라 적어도 싱어 역시 동의할 진술이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동물의 경우에는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커녕 도덕적 지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ㄷ. 무생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선지이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는데, 어떤 존재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칸트는 인간만을 도덕적 지위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는데, 인간은 생명을 지닌 존재이다. 반면 레오폴드는 생명이 없는 존재인 무생물까지도 도덕적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본다.

ㄱ. A: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테일러, 칸트, 레건 中 테일러만의 입장은 아님)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4번 문항 -

위 선지의 진술에 칸트나 레건이 동의함을 알 수 있다.

ㄹ.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유일한 경계, 유일한 조건이라고 본다. 반면 칸트나 레오폴드는 쾌고 감수 능력이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지 않는다.

20.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국제 정치 이론 비교하기

[Comment]

기출문제 +a이다. ④ 선지도 분명히 이미 언급된 적이 있는 내용인데... 당장은 못 찾겠다.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가)는 현실주의, (나)는 이상주의이다.

[선지 분석]

(나)가 (가)에 비해 높으면 1, 낮으면 0으로 표시한다.

X. 현실주의에서는 국제법을 통한 평화 실현에 회의적이며, 평화가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반면 이상주의는 국제법과 같은 국제적 규범을 통해 국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0)

1. 이상주의
 - 법률적·도덕적 수단을 통한 국제 사회의 갈등 조정을 중시한다.
 - 중심 개념: 집단 안보, 국제법, 국제기구
2. 현실주의
 - 군사력의 증강과 동맹을 통한 국제 분쟁의 억지를 강조한다.
 - 중심 개념: 국가 안보, 자력 구제, 세력 균형
 - 현실주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4번 문항 -

Y. 현실주의에서는 국가 간 분쟁의 원인을 인간 및 국가의 이기적 본성과 국가 간 힘의 불균형에서 찾지만, 이상주의에서는 국가 간 분쟁의 원인을 상대 국가에 대한 오해, 무지, 잘못된 제도 등에서 찾는다. (1)

- (가)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므로 국가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국제 관계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제 분쟁이 발생한다.
- 현실주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4번 문항 -

- (나) 인간이 이성적으로 행동하듯 국가도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가 간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무지나 오해, 동맹이나 비밀 외교 등으로 인해 국제 분쟁이 발생한다.
- 이상주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4번 문항 -

Z. 현실주의에서는 국제 사회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와 유사하다고 보면서, 모든 국가는 타 국가에 대해 잠재적 위협 요소라고 본다. 반면 이상주의에서는 타 국가를 협력 대상으로 본다. (0)

* 확인 사항
○ 해설지의 설명을 정확히 숙지했는지 확인하시오.